

# 광주시 상업시설 개선 방안에 건설업계 반발

### 상업지역 고층 아파트 건립 부작용에 개정법률 반영 못해 뒤늦게 오피스텔 준주택 규정 조례 개정안 마련 업계, 시장 면담 나서며 압박... '광주다움' 후퇴하나

광주시가 주택법에서 이미 지난 2010년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준주택)로 규정했음에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지역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층 개발에 집중하며 수익을 추구해 온 지역건설업계의 민원이 빚달치면서 민선 7기 광주시가 그동안 내세워 온 '광주다움'에서 후퇴하는 것이 난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정 회장의 면담 이후 시 내부에서는 점진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을 상업시설에 포함시켜 도심 내의 상업지역에 고층 주거시설(오피스텔+아파트)을 잇따라 건립하면서 도시 경관 침해, 학교 부족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상업지역 내 용도용역제(용도에 맞게 건축물 높이를 규정한 제도)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민선 7기 들어 '광주다움'을 내걸면서 더 진척됐고, 실무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됐

다. 광주시는 10월 입법예고, 지난 5일 법제 심사를 거쳐 12월 의안 광주시의회 상정, 내년 1월 조례안 공포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의 이 같은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시는 지난 2010년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분류한 주택법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거나 주거용 최대 용적률(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연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상업지역을 원래 기능에 맞게 개선하고, 주거의 쾌적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오피스텔을 상업시설에

제외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 울산시 역시 이미 시행했거나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외에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즉 상업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부대시설 포함)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부대시설 포함)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업지역에 순수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권장하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상업시설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 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기자 노트

### 누구의 일자리 시장인가?



오광록 정치부 기자

"미리 뽑을 사람을 정해 놓고 '공정한 방법으로 일꾼을 뽑겠다'고 말하는 것은 구직자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개방형 4급 상당) 공모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A씨가 29일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보건복지분야 경력자로 소개한 그는 이번 광주시의 전문위원 공모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A씨가 29일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보건복지분야 경력자로 소개한 그는 이번 광주시의 전문위원 공모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A씨가 29일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우선,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에서 일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광주시의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 시의원들은 "전문위원을 시장 캠프 인사가 맡게 되면 시정 감시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상처를 남긴 것도 빼아픈 일이다. 이미 캠프 인사의 서류접수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한 다른 응모자들은 그래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광주시를 믿고 면접장에 나왔다.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간절함은 면접 과정에서 산산이 무너졌다. A씨가 면접위원들로부터 받은 질문은 '자기 소개, 부하 직원 관리 방안, 하고 싶은 말' 등으로 허술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전문위원이 된 시장 캠프 인사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공모에

서 광주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안 전문직 ▲행정경험 풍부 ▲의회 근무 경험 등을 직무수행요건으로 명시했는데 이 캠프 인사에게는 그 어떤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시장 캠프 관계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12월 10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자리에도 이미 환경분야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선거 캠프의 또 다른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해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문처럼 선거 캠프의 또 다른 인사가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이 된다면 광주시의 대표 환경 기관 수장을 비전문가의 손에 맡기고, 그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시의회의 '비전문가인 전문위원'이 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전문위원에 이어 환경공단의 공모마저 정당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끝나면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은 오점을 남기게 된다. 구직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광주시의 공모가 되풀이되면 "민선 7기 시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이 결국에는 '전문성 없는 시장 측근을 챙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며 손가락질하는 시민만 늘어날 것이다.

/kroh@kwangju.co.kr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막 2018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이 29일 오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개막했다. 김우영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공동발전기금 갈등 상생 정신으로 풀어야"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나주시에 기금 전액 납부 촉구

광주시와 전남도가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29일 "상생의 정신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주시에 '혁신도시 유지 당시 약속했던 공동발전기금을 즉각 그리고 전액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와 이전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와 전남은 2006년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을 비롯한 16개의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유치함으로써 에너지밸리 조성 등 시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가 단독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공동발전기금 조성 관련 조례안은 기금의 종류와 규모, 출연 시기 등

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모든 조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해 세목과 세율, 징수시기를 법에서 정해 놓듯이 이 조례에서도 기금 조성의 방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 조성방법은 기금 조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로 막연하게 규정됐고, 기금조성 시기도 특별하게 정해진 사항이 없이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례안에 담긴 기금운용위원회의 구

성도 총 13명중 전남 5명, 나주시 3명으로 전남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사결정 구조여서 향후 기금의 원활한 조달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5년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지자체 성과공유계획에 의하면 '나주시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 공공기관 지방세의 7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공공기관 지방세의 30%를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주시가 혁신도시 유지 당시 약속했던 공동발전기금을 즉각 그리고 전액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의회 7조3000억 내년 예산안 통과

전남도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예산이 상임위 안대로 전액 삭감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조3000억원 규모의 전남도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6조7508억원) 대비 6100억원이 늘었다. 절차상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특별면부수가 없다면 예산안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에서는 사업별로 55건 78억 2000만원이 삭감되고, 41건 54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사업인 청년 첫 생애 국민연금 지원 사업예산 2억2500만 원은 상임위의 삭감안대로 모두 깎인 채

예결위를 통과했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예산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결국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예결위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예산을 삭감한 대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설 운영사업 예산을 1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다.

전남 수목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용역비 1억원은 상임위 안대로 남도 문에 전시관건립 건립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그대로 의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금은 1억원이 깎인 27억원만 반영됐으며, 시군 현안사업 지원예산도 22억원을 삭감해 44억원만 통과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본 투시는 고가의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재차타워,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정문, 모아엘가 우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사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사행 | 기보종합건설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